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 파트너 형성이 동반성장 이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와 대·중소기업계가 모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사회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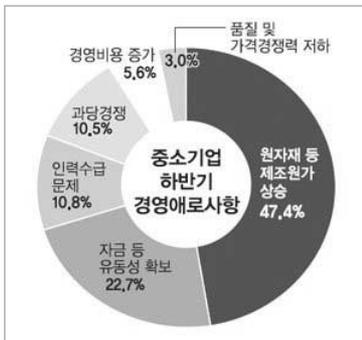
최근들어 정부는 각종 상생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생’이라는 말 대신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방적 시혜 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태계가 커질수록 일부 요소의 투입보다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공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업계의 반응, 설비업계를 대변하여 대한설비건설 협회가 건의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1.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으로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속적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①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단가 조정 업무를 못 냈던 중소기업에 대신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단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정 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당분간 일몰제(그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

도)로 운영하고,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항구적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지원 기능도 활성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고 납품단가 조정 효과를 2차 이하의 협력사로 확산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내역 통지 의무사항을 뒤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및 벌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Fast Track 제도



▲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에도 적용된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전략

추진전략	정책과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 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 동반성장투자액 세액공제(7%), 확산 인프라 구축 ● 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 석유화학 가격예시제 실시, 철강재 안정적 확보지원 ●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경영·회계투명성 강화, 상시적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 ● 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생산성·R&D·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확충 지원 ● 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 산업단지 환경 개선
추진·점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지수 공표 ●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점검반」 구성

②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정부는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깎으려 할 때는 원사업자(대기업)가 감액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감액사유와 산정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납품업체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정위가 입증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또 구두발주 후 일방적인 위탁취소나 불공정 계약서 작성강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서 작성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주 예정사실과 물량을 수급업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예측가능한 발주 시스템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최근들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공인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이른바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모두 182건으로 지난 2년간 수치를 모두 합한 146건 보다 24.6%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는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보관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부당하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소기업 단독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치기관 기밀금고를 기존 400개에서 3,000개로 확충하는 등 기술자료 임치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기술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이용해 간접 확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는 기술자료 요구시에는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귀속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원가자료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해 실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료가

탈취된다면 대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④ 1차에서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

정부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정부의 R&D 사업 내 대·중소기업 공동 R&D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 비중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올해 600억에서 내년 800억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한편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 등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으로 협력사에 보증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2·3차 협력사 지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3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에 평가지수를 반영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한편, Supply Chain 분석을 통해 협력사의 특성에 맞는 지원모형을 발굴할 계획이다.

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정부는 동반성장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평가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부당한 계약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데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예정이며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공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⑥ 경영 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정부는 역량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非외감대상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정책 자금지원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할인할 방

침이다. 또한 「상시 구조개선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세제·금융 및 합병·영업양수 등 절차와 제도상의 특례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⑦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한국형 생산혁신방법을 개발·보급하고, R&D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및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녹색성장 중소·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신성장 분야의 초기 시장을 발굴하고 성장장애요인을 제거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각종 부품을 국산화시키고 M&A 매칭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⑧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활용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의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도입 쿼터를 신속적으로 운영하고 외국인력 선발제도를 개선해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절차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 연구요원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치되던 것을 개선해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해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했고, 이를 창업 및 시설투자자금에 지원할 계획이며 정책자금·보증심사시 성장의 미래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⑨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 마련

온라인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의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 접수 창구인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와 연계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이를 통해 신고된 애로사항을 소관부처(지경부·중기청·공정위 등)로 신속히 연결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한 후 신고 접수 상황 및 처리실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게 된다.

한편 범부처 차원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이 활동에 들어간다.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은 매월 동반성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하며 업종별·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국민경제대책회의 (대통령 주재)」에 보고하게 된다. 또한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파악된 불공정 거래사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상향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2. 대기업 - “발주자 상생이 선행돼야” 중소기업 - “하도급 위반에 대한 처벌 미흡” 지적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 예고 이후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열기는 매우 뜨겁다. 정부는 △원자재값 상승시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행위 방지 △협력사 지원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이번 대책에 대기업들도 보다 실질적



인 협력사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원-원' 분위기에서 불만도 적지 않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도급 상생에 앞서 발주자의 상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공사나 민간도급공사 모두 가격이 수주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 최저가 낙찰제 시스템에서 최저가로 낙찰받다보니 역시 하도급 업체에 최대한 낮은 가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최근들어 국내 공사물량도 위약 없기 때문에 '상생'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대기업이 내부 경영 효율화에 힘쓰지 않으면서, 아직도 최대치의 이윤을 확보한 뒤 하도급 업체에 인심 쓴다는 심정으로 발주하는 구태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전문건설업계는 최근의 정부 대책과 대기업이 연달아 내놓은 상생협력력 방안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초저가 하도급 결정행위 △하도급 대금의 대물변제 △현금 결제비용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상생협력 방안을 쏟아내더라도 처벌 수준이 권고 혹은 가벼운 벌칙에 그치다면 매년 반복되던 말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호민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관계부처에 설비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후속 대책에 전문건설업계의 보호장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관계 부처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하도급 상생 입찰제도 도입

현행	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문제점	원·하도급 간 수직적인 건설생산체제로 인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 만연으로 하도급업체의 급격한 부실화 초래
건의 내용	원도급자 입찰시 하도급자를 함께 평가하는 원·하도급 상생입찰제도 도입

②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방지대책 마련

현행	하도급 계약이 82% 미만일 경우 저가하도급 심사	
문제점	- 원사업자는 저가하도급 심사를 피하기 위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 공종 단가를 고의로 낮추어 하도급율을 82% 이상으로 맞추고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저가하도급 심사기준마져 없음	
건의 내용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ext{하도급}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text{하도급부분금액}}$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ext{하도급율}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text{하도급부분예정가격내역} \times \text{낙찰률}}$ </td> </tr> </table>	$\text{하도급}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text{하도급부분금액}}$
$\text{하도급}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text{하도급부분금액}}$	$\text{하도급율}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text{하도급부분예정가격내역} \times \text{낙찰률}}$	
	- 민간공사에서도 저가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③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강화

현행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의무화
문제점	- 건설공제조합 약관에 하도급대금의 보증책임을 원사업자의 부도·파산·법정관리 등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한정 - 원사업자가 워크아웃 또는 고의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미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받아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음
건의 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책임(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등)을 '하도급법'에 명시

④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

현행	IMF이후 기업의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실시
문제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경기 악화로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인인 구매기업(원사업자)이 만기에도 미결제 사례 급증
건의 내용	-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 무분별한 외상매출채권 발행 기업 및 이를 허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처벌조치 마련

⑤ 건설공사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

현행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2배를 초과하고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문제점	- 시공능력이 2배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종합건설업체가 오히려 원사업자 지위를 악용, 불공정하도급거래 남용 - 2009년 현재 종합건설업체 수는 12,321개사로 하도급법 제정시(1984년)보다 15배 정도 폭증 - 종합건설업체의 약 32%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으로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됨
건의 내용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를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1배를 초과하고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

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공사 전면 도입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사업자의 파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의 경우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실시
문제점	공공공사의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 미지급·지연지급·불법 어음지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 지속
건의 내용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전면 시행토록 '하도급법' 개정

⑦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기일(60일) 단축

현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와 도산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기일 60일 도입
문제점	-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기일 60일은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사업운영, 자금조달 등 유동성 문제와 직결됨 - 사회적인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25년 전의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기일 그대로 유지
건의 내용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기일을 30일로 단축

⑧ 하도급대금 어음할인을 차등 적용

현행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으로 지급
문제점	- 투기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의 어음은 시중은행 할인시 할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할인도 어려움 - 제2금융권 혹은 사채시장에서 할인시 막대한 할인을 부담
건의 내용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어음할인을 차등 적용

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현행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문제점	- 종합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거부업체 만연 - 민간공사의 경우 40.9%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건의 내용	- 건설공사 현장, 특히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실시 - 교부의무 위반자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

4.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

대기업의 상생협력은 1차 협력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3차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방안과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각종 펀드 등을 통한 자금지원, 하도급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재무 컨설팅을 통한 경영지원 등이 그것이다.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나 해외 시장 개척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기업의 상생방안이 여론 무마용이나 대외 선전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중소기업들의 형편은 훨씬 나아질 것이며 성장의 혜택을 협력사와 같이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잡을 것이다.

■ 현대산업개발, 협력사와 그린 파트너십 구축

① 협력사와 함께 친환경 건설 추진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산업개발과 10개의 협력사는

공동주택 건설시 친환경성을 높이는 한편 설계, 시공, 사용·유지보수 등 건축 전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실행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탄소배출량 감축은 물론 협력사들은 녹색기업인증 취득도 지원받게 된다.

② 에너지 절감 기술 협력사와 함께 개발

현대산업개발은 고효율 단열재, 복합 단열공법, 에너지 절감형 창호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뒤 아이파크 시공 현장에 우선 적용하는 '기술개발-납품'이라는 선순환을 통해 협력사에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한 신소재, 신공법을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다른 건설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협력사들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③ 안전품질위원회 구성, 상생경영에 박차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안전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상생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품질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품질 개선과 안전 유지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 고민하는 조직으로 협력사가 담당하는 공정에까지 수준 높은 안전·품질 관리가 가능케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실천! CLEAN 5 운동' 등을 협력사와 함께 전개하면

서 지속적인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마다 품질 경연대회를 통해 협력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 대우건설, 상생경영팀을 통한 불공정요소 모니터링

① 공정 거래 위한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대우건설은 지난해 562개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도 체결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계약, 협력사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② 협력사에 자금, 기술, 교육 지원

대우건설은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 교육지원, 경영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사 대표·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채권·노무관리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자문·자금지원·기술개발·공동 특허 개발 등도 지원하고 있다.

③ 100% 현금 결제, 해외 동반진출

대우건설은 협력사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지원·기술개발비, 선급금 등 약 122억원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결제비율도 100%를 유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초창기 협력사들과 외국시장 동반진출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지금은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협력사와 국외공사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협력사와 함께 글로벌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동반성장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협력사와의 관계 지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 대림산업, 자금지원+기술지원+D&P제도

① 협력사 재무지원 상생펀드 조성

대림산업은 지난 8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사 재무지원을 위한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이 협약으로 약 300억원의 상생기금이 조성됐으며 대림산업 협력 대출 재원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또한 무보증·무이자 운영자금을 마련해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기성대금이 2차 협력사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로 등록된 모든 업체의 하도급 계약 이행보증을 감경해 줄 뿐만 아니라 우수 협력사에게는 계약이행보증도 면제해 주고 있다.

② 협력사와 함께 기술개발

협력사와 공동 기술 개발도 한창이다. 진공 복층유리, 바닥충격음 차단시스템 기술을 비롯하여 총 11건의 기술을 개발했으며, 기술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또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협력사와는 우선 계약을 진행해 협력사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D&P(Design&Procurement) 제도를 2002년부터 운영해 설계와 디자인 단계부터 협력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연간 단가 공급계약을 통해 협력사에게 안정적인 공사 물량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과 기술·공법 개발에도 보탬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③ 외국 동반진출과 경영혁신 지원

대림산업은 외국 발주처에 등록되지 않은 국내 기자재 업체의 등록을 돕거나 국외 공사에 동반 진출하는 등 특히 외국 플랜트시장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외부 신용평가기관 재무컨설팅을 협력사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환경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④ 상생협력 전담반 조직

대림산업은 협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상생을 이루기 위해 외주조달실장을 최고책임자로 하여 상생협력 전담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경영 방침에 협력사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탄소배출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그린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현대건설, 상생협력 펀드로 협력사에 자금 지원

① 협력사에 금융지원 강화

현대건설의 협력사 가운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시중금리보다 최대 1% 포인트 낮은 저금리가 적용돼 협력사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② 대금지급기일 완화로 협력사 자금 유동성 개선

한편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금지급기일 조건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현금지급 비율도 늘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을 매월 20일에서 13일로 7일 단축했으며 현금지급 비율을 지난해 말 50.6%에서 57%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또한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단기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협력사에 대해 연 2회 무이자로 직접 대출해 주기로 했다.

③ 협력사 실무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대건설은 인력관리부터 구매 관련 등 실무 강의에 이르기까지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종별로 하도급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협력사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

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 코오롱건설, 지역 협력사와 함께 커뮤니티 구성

① 지역 협력사와 커뮤니티 강화

코오롱은 지역 사업장과 협력사를 찾아 현장 경영을 펼치면서 상생경영 공동체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선언은 지난 2007년의 '노사 상생 선언'을 골자로 한 '노사화합 경영'을 지역 사업장과 협력사 상생협력까지 확대키로 했다. 코오롱은 이를 계기로 협력사와의 관계를 단순 하도급 또는 외주 회사가 아닌 한 가족으로서 동반자적 지위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협력사와 함께 OI(Operational Improvement·변화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사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을 실현해 생산현장 안전과 품질 경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② 우수협력사에 대한 거래조건 혜택 부여

코오롱은 매년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거래조건에 혜택을 부여해 협력사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 계열사의 협력사와 이뤄지는 거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개선·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계열사들이 협력사와 진행하고 있는 상생협력 가운데 우수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묶어 전 그룹사가 공유하는 등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지원 강화

또한 영업·생산·연구 각 분야 임원과 담당자들이 협력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선사항에 대해 지도하거나 공동 개발 노력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술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해 중소기업에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간 협약도 체결해 운영 중이다. 상대적으로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공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 두산그룹, 협력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

① 협력기업 대출제도를 통한 자금지원

두산중공업은 ‘협력기업 대출’ 제도를 통해 협력업체가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전자계약을 담보로 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는 계약금액 80% 안에서 일반 신용대출보다 약 3%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 두산중공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선급금이 없는 계약도 운영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협력사와 함께 부품 국산화 및 성과 공유

두산은 국산화 부품의 공동개발 및 구매조건의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현재 추진중인 해상용 풍력발전시스템 프로젝트는 16개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맺을 때 협력사에 우선실시권을 부여하고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협력사의 기술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시행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동일하게 나눔으로써 협력사 특유의 강점과 뛰어난 노하우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③ 교육 및 품질개선 지도를 통한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

두산은 협력사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직원을



▲ 두산그룹 원-원 상생지원 모델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품질관리, 기계가공, 용접기술 등 9개 분야 24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공정개선과 품질개선 지도는 물론 산업품질 명장들이 직접 협력사를 방문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 한화그룹, ‘한화-협력사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협력사 지원

① 상생협의회를 통해 정보 및 기술 교류

협의회를 통해 한화-협력사 상생협의회 정례회, 구매 조건부 협력사업 발굴과 신규 사업 공동 참여,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 애로·건의 사항 수렴, 협력사 신사업·기술·원가절감 등 제한활동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각 사업부 임직원과 77개 주요 협력사가 참석한 제2회 상생협의회 행사에서는 △우수 협력사에 대한 전액 현금 지급 등 대금지급 조건 개선 △협력사 기계설비와 원부자재 확보 등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시행 △품질간담회 내실화와 금형·치구 무상 대여 등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②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면 혜택 부여

한화건설의 ‘우수협력사 간담회’는 협력사와 상생협력 증진에 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협력사로 선정되면 1년간의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한화에서 조성한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GS, 장기계약을 통한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 도모

① 장기계약을 통한 협력사의 재정 안정 확보 및 협력사 지원센터 운영

또한 우수한 협력사와는 2~3년 장기 계약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신사업 추진 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 지원을 체계화 하기 위해 '협력사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학습조직 운영 등 지식경영활동을 신규 지원하고 혁신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② 현금 지급비율 높이고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편 구매카드 지급비율을 축소하고 현금 지급비율을 높이면서 구매카드 지급기일도 단축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계약 및 하자이행 보증 면제 등 지원도 계속하고 있으며 GS건설의 안전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혁신 마인드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해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 롯데그룹, 자금난 해소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①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중소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론 규모를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의 금리 감면과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하고 있으며 현금 결제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② 협력사와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의 외국 진출도 적극 도와 글로벌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에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에 공정거래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매년 우수 협력사를 발굴해 롯데건설과 협력사들이 중국, 일본, 두바이, 베트남 등에 동반 진출하고 있으며, 외국 현장 연수 기회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성과 공유제'를 도입해 공동 경영혁신 활동을 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③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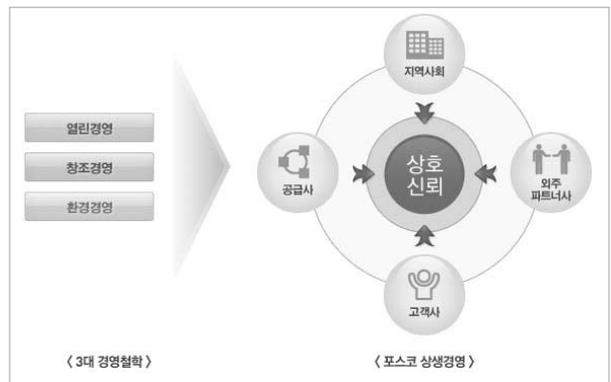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2003년부터는 웹을 기반으로 한 '전자조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입찰, 계약, 정산, 각종 보증서 제출, 제증명 발급 등 건설조달 프로세스 전 분야를 온라인화 해 윈스톱 처리가 가능하고 계약이나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도 예방하고 있다.

■ 포스코,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모든 프로그램 제공

① 2차이하 협력사도 상생협력 지원

포스코는 기존 1차 협력 중소기업은 물론 2·3·4차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됐던 상생활동을 그 이하의 협력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1차 협력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내용이 2~4차 협력기업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약관 반영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업종별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사들이 다음 분기 가격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성과공유를 위해 포스코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맞춤형 기술지원'과 '성과공유제'를 연계하는 '패키지 프로그램(Package Program)'도 시행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금융 지원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적용한다. 포스코의 금융지원펀드의 대출 대상이 기존 1차 협



▲ 포스코의 상생경영 전략

력사에서 2~4차 협력사로 확대되며, 1차 협력기업에 대한 현행 현금 결제 방식이 2차 이하 협력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단가조정, 제도개선 등의 내용도 역시 2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협의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달함으로써 정보교류의 폭도 넓혔다.

② 상생협력 특별펀드 조성

금융지원 규모도 커졌다. 포스코는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상생협력 특별펀드를 더 조성하고 협력 기업 지원펀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과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 지원도 이뤄지게 했다. 이와 함께 설비구매 중도금 제도를 신설해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건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요청하면 30%의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③ 해외 판로 개척지원과 기술지원 교육을 통한 협력사 경쟁력 확보

태국과 인도의 해외 기지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개설해 협력사의 2차 제품 수출 입찰을 돕고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660여 명의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기술컨설팅, 시험연구장비 무상 이용 지원 등 테크노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자체 보유 중인 우수한 교육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협력업체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도 운영 중이다.

④ 상생협력 실천 사무국에서 협력사 지원

포스코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상생협력 실천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해 앞으로도 상생협력을 추진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상생협력임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과 목표를 재점검함으로써 내실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삼성물산, 금융지원 및 특허기술 지원

①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삼성물산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유망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현지법인 설립 및 영업 지원 △해외판매(수출) 지원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 종합상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 유망수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② 협력사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액 현금결제 지원 검토

삼성물산은 전액 현금결제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면 회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력사에 대금지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규모 확장으로 해외공사 경험을 갖춘 협력사를 파악해 동반 진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③ 보유중인 기술 협력사에 무상 제공, 임직원 기술 교육 지원

삼성물산은 보유중인 특허 및 실용신안 207건을 협력업서에 무상으로 제공해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7건의 지식재산권은 삼성건설이 최근 10년간 약 410억원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또한 협력사의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교육과 협력사 현장소장의 관리기술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및 원가혁신, 리더십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